

공동연구를 마치고

金泰植

4세기 한일관계에 대한 역사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1분과 共同研究會 後記에 대신하여-

濱田耕策

共同研究를 마치고

盧重國

第1分科委員會의 活動을 마무리하면서
-座談會와 研究內容에 대한 批評-

石井正敏

共同研究를 마치고

金鉉球

공동연구를 마치고

佐藤 信

共同研究를 마치고

4세기 한일관계에 대한 역사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 제1분과 共同研究會 後記에 대신하여 —

金泰植

I.

2001년에 일어난 일본중학교역사교과서 파동으로 인하여 2002년 5월에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 제1분과 위원이 되고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기여를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연구를 시작한지 벌써 2년 8개월이 지났다. 시간은 그처럼 빨리 지나갔으나, 기나긴 역사의 결과로서 조성된 사건이 그렇게 쉽사리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절감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그동안 대략 2개월에 한 번씩 양국을 상호 방문하면서 개최된 분과합동회의를 통하여, 1분과 위원들은 각각의 위원별로 4차례 이상의 부분적인 연구발표를 하였고, 연구발표 뒤에는 해당 지역의 유적들을 공동조사하면서 옛 현장에서의 역사인식을 체감하였으며, 이는 양국 위원들의 연구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최종 원고의 주요 내용은 2004년 6월 3~5일의 제5회 전체합동회의 겸 연구발표회(서울) 당시 발표된 것을 보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한국측 위원들은 廣開土王陵碑文, 宋書倭國傳, 日本書紀 등을 분석하여 이른바 ‘任那日本府說’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일본측 위원들은 여러 사료상으로 볼 때 왜군이 한반도 남부에서 군사 활동을 하였고 왜왕권이 한반도 남부 지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양측 위원 주장이 어긋나지만, 양측 주장의 공통점은 왜가 실제로 한반도 남부 또는 임나를 군사적으로 지배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Ⅱ.

이 공동연구보고서의 논문 중에 4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 것은 濱田耕策 위원의 ‘4세기의 일한관계’이다. 그 중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本論 제1장에서는 七支刀가 372년에 백제왕세자가 水平關係의 外交로 왜왕에게 보낸 것이고 이는 백제가 그 해에 동진의 外臣으로 된 국제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그 라인 위에 倭國을 參入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백제왕은 東晉皇帝가 369년에 만들어 두었다가 372년에 자신에게 준 칠지도를 왜왕과도 공유하기 위하여 그 해에 바로 이를 仿製하여 보냈으며, 동진의 칠지도에는 앞면에만 글씨가 새겨 있었지만 백제는 이를 똑같이 모방한 별도의 칠지도를 만들면서 새로이 뒷면에 글씨를 새겨 왜에 보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현존하는 칠지도의 앞면과 뒷면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글자인 ‘造’ ‘百’ ‘刀’ ‘王’자의 字形에 차이가 많고 시차가 있었다는 山尾幸久의 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해당 글자들은 약간의 자형 차이가 있다고 해도 획을 긋는 의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앞면에만 두 번 나오는 ‘百’자의 경우에도 두 글자 사이에 약간의 형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동시에 쓴 글자이나 단단한 鐵劍의 표면에 글자를 새기는 과정에서 자형에 약간의 차이가 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만일 백제의 칠지도가 동진에서 받은 칠지도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라면, 백제가 새로 넣었다는 문구에 어째서 “先世以來未有此刀”, 즉 ‘예전에는 이러한 칼이 없었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372년에 백제왕이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으면서 칠지도를 받자마자 곧바로 그해에 똑같은 칼을 만들고 그 뒷면에 거짓말까지 새겨 넣어 왜왕에게 보냈다고밖에 설명될 수 없다면, 그 해석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本論 제2장에서는 광개토왕릉비문을 통해서 391년부터 404년까지 왜군은 백제와 連携하여 한반도 南部의 新羅地域부터 中部의 帶方界까지 출몰하며 고구려와 싸웠고, 이로 인해 고구려는 ‘사실과 달리’ 왜가 백제와 신라를 臣民으로 삼았다고 인

식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여기서 왜군이 백제를 臣民으로 삼은 지배관계는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百濟가 주도하여 倭와 加耶諸國이 협조를 이룬 三者連携였다고 파악한 점은 정확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비문에 나오는 기록만 보더라도 백제는 왜와 '和通'한 상태였고 신라는 왜인의 공격을 받는 상태였으므로 고구려가 이들을 동일한 용어인 '臣民'으로 인식 또는 과장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역시 몇 글자가 보이지 않는 辛卯年 기사를 무리하게 추정하여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셋째로 附論 제1장에서 4세기가 아닌 기원전 2세기 한사군의 설치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의 일을 논문 1편 분량으로 다루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 공동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한국측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 논문에서 '魏로부터 邑君·邑長의 印綬를 받은 삼한 臣智層은 이미 魏에 臣從한 입장에서 倭國使를 帶方郡이나 洛陽까지嚮導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존재'라고 본 것은 삼한 신지들의 주관과 능력을 과소 평가하고 당시의 국제정세를 일본 위주로만 파악한 것이다.

또한 고조선이 중국과 真番과의 통교를 방해하자 한 무제가 노했다고 한 것은 '진번'이 아니라 '眞番旁辰國(또는 衆國)'과의 통교를 방해했다는 것에 대한 오류가 아닐까 한다. 한반도 북부 전체와 남부에 미치는 땅이 군현 통치를 받았다고 기술한 것은 진변군이 남한에 있었다는 가설을 인정한 듯이 보이나, 이것은 학계에서 유력한 설이 아니므로 대대적인 해명을 필요로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위 논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4세기의 한일관계를 논하면서 그 당시 일본열도의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국은 마치 하나의 중앙정부에 의하여 왜국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것처럼 상정한 데 있다. 이는 물론 당시 일본열도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문헌사료인 《日本書紀》가 부정확하여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4세기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논하려면 우선적으로 양국의 내부 상황, 양국의 문화능력 등이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4세기 당시의 일본열도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생산능력과 전쟁능력, 사회조직 등과 같은 문화능력의 면에서 왜국이 한반도의 각국보다 우월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III.

제1분과는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좌담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4세기와 5세기에 대한 좌담회는 이미 2004년 6월 12일의 제16차 회의(江陵市) 때 이루어져 제17차 회의(松江市)에서 그 녹취록을 교환하였고, 6세기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좌담회는 2004년 10월 30일의 제18차 회의(晉州市)에서 재개하고 2004년 12월 19일의 제19차 회의(對馬島)에서 그 녹취록을 교환하였다.

4세기에 대한 좌담회에서 필자가 4세기 한일관계사의 연구 진전을 위해相互認識上의 共通點과 差異點을 確認하기 위하여 제기한 문제는 ① 日本書紀 神功 49年條 7國 平定記事의 理解, ② 廣開土王陵碑文 所載 倭軍의 性格, ③ 4世紀 韓日關係의 基本性格 등의 세 가지였다.

실제의 좌담회에서 양측 위원들은 (1) 日本書紀 神功 49년조 기사는 8세기 일본인들의 인식일 뿐이고, (2) 근래에 神功紀 49년조 기사를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믿는 연구자는 한일간에 거의 없으며, (3) 廣開土王陵碑의 倭軍이 高句麗에 대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1) 神功紀 49년조 7國 平定記事는 사실이 아니라던가(한국측)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일본측) 것과, (2) 廣開土王陵碑의 倭軍은 高句麗와 싸우던 百濟의 援軍일 뿐이라던가(한국측) 또는 高句麗의 南下에 대한倭의 위기의식에 의한 파견군이라는(일본측) 것이다.

좌담회 제1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측 위원들은 여러 문제 사료들의 무효성을 주장한 반면, 일본측 위원들은 그것이 사료 제작자인 일본측과 고구려측의 당시 또는 후대 인식일 뿐이지만 사실 여부는 확정지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神功紀 49년조 기사에 대한 논란과 그것에 토대를 둔 일부 개설서나 교과서의 서술이 문제가 되어 지루하게 논쟁을 하다가 상호간에 공감을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즉, 《日本書紀》 神功 49년조에 토대를 두고 성립된 末松保和의 任那日本府說은 기존에는 한동안 통설의 지위를 누렸으나, 지금의 한국과 일본학계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 학설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代案으로서 4세기의 한일관계를 보는 시각은 여러 모로 엇갈려서 통설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 개설서나 교과서에 기존의 역사인식이 잔존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여, 결국 4세기 한일관계의 기본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加耶史와 그 주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고고학적 유물의 출토 상황으로 볼 때,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 가야제국 중의 맹주국인 金海의 加耶國과 일본 畿內地域의 신흥 河內 세력은 鐵素材를 매개로 긴밀하게 交易하였다. 그 철소재 생산과 유통의 주체는 물론 가야였다.

좌담회 제2부에서는 6세기의 한일관계사와 앞으로 고대한일관계사를 위한 양국 공동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전망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倭의 南韓經營論과 같은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또 일본 국내의 곳곳에 있는 神社 등의 유적지 案內板에 ‘神功皇后의 三韓 정벌’과 같은 용어가 적혀 있는 것은 문제이나, 일본에서는 이를 신화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일부 안내문에는 이를 ‘한반도와의 문화교류 결과’로 수정한 것도 있다는 점은 일부나마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가야지역의 고고학적 성과에 의하면 가야지역을 일본이 오랫동안 점령을 했단다니 지배를 했다든가 하는 증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물로 볼 때, 가야는 엄연히 백제, 신라, 왜 등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문화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다. 사실 4세기의 동아시아는 중국의 분열과 함께 다원적인 체제로 재편되었고, 한반도에서는 이를 고구려와 백제가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반면에 신라, 가야, 왜는 그들 나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그에 부수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였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IV.

마지막으로 제1분과 한국측 간사로서 次期 委員會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1분과에서 다루는 고대 한일관계사의 경우에 적어도 기원전 5세기경부터 기원후 10세기경까지의 기간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씩 점진적으로 연구한다는 관점에서 이번의 위원회에서는 가장 긴요한 4~6세기의 한일관계사만 공동 연구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대 한일관계사 관련 쟁점 중에서 일본 農耕 및 金屬文化의 起源問題, 日本列島로 이주한 古代 韓國人(이른바 ‘渡來人’)의 文化傳授 문제, 古代 中華秩序와

朝貢에 대한 偏見, 唐의 등장과 관련한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律令國家로서 新羅의 위치, 渤海와 日本의 관계, 日本 天平文化와 新羅와의 關聯性 등의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4~6세기의 任那日本府問題에 대해서도, 그 현장인 加耶의 상황과 관련하여 좀더 깊고 세부적인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속에서 한국사도 일본사도 함께 一段의 진전을 보기를 기대한다.

共同研究를 마치고

濱田耕策

人文學, 그 중에서도 역사학의 공동 연구가 성공리에 성과를 내었는가 여부는 더욱 연구자 사이에 평가가 나올 것이다. 하물며 고고학도 아닌 문헌사학의, 그것도 日韓 사이의 역사인식의 離隔와 마찰을 해소하려고 하는 관심 속에서 진행된 關係史의 연구에서는, 극복해야만 장래 성공의 조건이 될 것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우선 ‘서로 자기주장만 하는 논의’에 빠지는 듯한 국면이 있었던 것을 日韓의 委員이 서로 느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배경에는 이웃 나라와의 관계사가 근대 국제관계의 개념으로 분석 해석되었고 그 때문에 近代 日韓 關係史가 古代의 關係史에 중첩되는 듯이 해석되어 인상을 주고 또 인상을 받아버리는 경향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隣國間의 關係史는 日韓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의 교류와 침공의 역사가 교차하고 있었다. 이 고대의 관계사를 논하는 속에 의식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근대의 역사의식에 기초한 판단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어려움이다.

나는 古代의 日韓關係에서는 오늘날의 개념에서는 읽어낼 수 없는 古代의 感각이라고도 해야 할 판단과 心象이 관계사의 당사자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 古代人的 心象에 들어가는 것은 역사 연구자의 자세로서는 신중해야 할 것이겠지만, 4~6세기의 고대 일한관계가 일한의 1 대 1이 아니라, 倭國對百濟, 倭國對加耶 관계이며, 그 관계는 百濟, 加耶, 高句麗, 新羅 상호관계의 전개와 연관되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관계를 담당하였던 고대인의 심상은 심지어 근대 관계사의 개념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사람과 물자가 한반도 남부의 다도해에서부터 섬들을 멀게 가깝게 조망하면서 200여 킬로미터의 바

다를 건너고, 또 거꾸로 일본열도에서 渡海하였던 서로간의 의지와 행동의 원천이야 말로 관계사의 原點이다.

다음으로, 日韓이 향후의 공동연구를 지향해도 -이것은 日韓 모두에게 서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關係史像을 구축하기에는 日本列島 内, 또 한반도 内에서의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의 연구와 그 논점, 그리고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합적으로 관계사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거기에는 근년 눈부시게 발전한 일한 고고학의 연구 성과와 그 문제점과의 정합적 구축이 요구되지만, 문헌사학과 고고학의 협조는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는 어려운 협업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대 일한관계사 속에서 백제와의 관계사는 주목할 위치에 있다. 4~6세기의 왜국과 고구려, 신라와의 관계는 대립관계에 문제가 집약되어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다. 이와 달리 왜국과 백제의 관계사는 ‘友好’와 ‘同盟’의 관계 등으로 표현되는 것 이상으로 장기간 밀접한 관계였다. 이 밀접한 관계의 심층을 해명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백제를 객체로 하는 시각에서 그 관계사가 이해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백제에서 왜국에 문화를 전파하였다는 시각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도 또한 왜국을 백제의 객체로 하여 관계사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를 객체로 하여 구축한 관계사의 歷史像을 뛰어넘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각국의 국가형성사 속에 구조화된 관계사를 구상하는 것이 기대된다. 百濟, 加耶, 高句麗, 新羅 상호의 關係史, 나아가서는 古代의 日韓關係史를 각각의 국가형성사에 빼뜨릴 수 없는 역사로서 구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왜국과 백제·가야의 관계를 문화의 전파로서 강조한 우호와 동맹이라고 하는 근대 외교사의 개념에서 파악해 온 관계의 실체에는, 그 개념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거기에서부터 國家가 탄생하는 영양소라고도 할 日韓關係史像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기대된다. 日韓 사이를 왕래하였던 유명한 승려와 박사, 그리고 장군이든 무명의 사람이든 간에, 그 왕래에는 국가의 차원만으로는 전부 해석되지 않는 渡海의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 일례로서 4~5세기의 日韓關係史에서는, ‘廣開土王碑’와 《日本書紀》와 《三國史記》에 기록된 ‘倭兵’은 백제가 왜국에 援兵을 구하였던 ‘傭兵’이라고 하는 설이 한국에서는 넓게 이해되고 있다. ‘倭兵의 進出’이라는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이해가 아니라, 시각을 백제의 입장에 강하게 둔 이 해석은 百濟의 內政에 입각해 본다면 반드시 무리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왜국의 입장은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倭兵’의 행동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진출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되고, 鐵로 대표되는 물자와

문화의 계속적인 획득과 그 루트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적극성 있는 派兵이라고 보는 일본학계의 이해도 성립할 것이다.

다만 본인은 왜국과 백제·가야 사이에는, 이러한 양자를 분리한 위에 어느 한 쪽에서 '傭兵'論 또는 '鐵과 文化的 受容과 供給'이란 한 가지의 方向性 만을 강조하여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뭐랄까 兩者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일체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공동연구의 席上에서, 이렇게 느껴진 왜국과 백제·가야의 관계를 '運命共同體'일 것이라고 표현하자, 한국측 위원 한 사람으로부터 강한 거부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는 이 목소리 속에 근대의 일한관계가 고대의 관계에 겹쳐 지면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였다. 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일체감이란 무엇일까 自問하여 보건대, 왜국의 對 高句麗·新羅와는 다른 百濟·加耶와의 관계는 단순히 兩者가 상호 왕래하는 관계사로서 파악하는 시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역사적인 深層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물론 이것은 '日鮮同祖論'을 재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일한관계사의 연구 시각을 새롭게 시도해보려고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관계사가 그냥 상대와 1 대 1의 관계에서 고찰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널리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이다. 이 1 대 1의 관계를 포함한 兩者의 다면적인 관계를 고려한 고찰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일찍이 제기되었던 학설로서, 1962년에 中國史家 西嶋定生의 '冊封体制論'이 있다. 이 說은 중국황제와 주변 제국의 왕 사이에 맺어진 君臣關係가 각각의 국제관계와 국내의 체제를 규정한다고 하는, 동아시아의 체제론이다. 이 이론에 기초하여 많은 일한관계사의 연구 성과가 제출되어 있다.

또 그 해에는 石母田正이 고대의 일본은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로부터 朝貢을 받는 '東夷의 小帝國'이라고 하는 일한관계의 역사상을 제기하였다. 이 두 학설 속의 日韓關係史像은 그전까지의 개별 관계사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면서도 그것들을 동아시아 세계의 역사로서 구조적으로 이해한 학설이다.

이 두 학설 속에서 중국과 일본에 시점을 두어 구조적으로 이해된 日韓關係史像是 굳건한 것처럼 보인다. 거기서 해석된 사료의 범위에서는 정리되어 있지만,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긴요한 위치에 있는 고대 한반도의 諸國이 일본과 중국의 측면에서 파악되고 있어, 고대 한반도 제국에 입각한 국제관계사를 새롭게 구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지금까지 고대의 일한관계사는 주로 일본의 고대사가와 중국사가에 의해 많은 연구가 제출되어 왔다. 그 때문에 한국, 조선의 역사학계에서는 오늘날에도 우선 이들

을 비판하는 것에 세력을 모으고 있는데 머무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金錫亨의 ‘分國論’에 연결되는 연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비판력이 있다고는 하나, 日韓의 학계로부터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학설로는 이해되지 않고 있고, 또 한국 고대사에 입각한 日韓의 關係史像이라고도 반드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한반도에서 온 ‘渡來人’이 고대 일본의 국가형성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하는 ‘도래인’ 史觀은 근년 주목되고 있는 백제나 가야에도 왜인의 ‘渡來人’이 있었던 데에서 보이듯이, 이 서로 간에 있었던 移住民을 국가 형성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로 발전하여 새롭게 고찰될 과제일 것이다.

이런 속에서, 고대 동아시아 속에서今日的으로는 ‘허브의 위치’에 있으며 또 스스로 운동하는 한국고대사의 시점에서 넓게 동아시아의 역사를 외교의 관계사에 머물지 않고 제도나 문화의 비교 연구까지도 포함하여 구조적으로 파악된 關係史像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이상, 3년간의 공동연구와 공동조사를 마치고, 그 동안에 본인의 뇌리를 오고간 공동연구의 感想과 앞으로의 기대를 기술하여 보았다. 이번에 한국측 연구자는 ‘日本의 教科書’와 소위 ‘任那日本府論’에 대한 비판을 연구의 시작으로 삼아 시종 일관 연구회에 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구논문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한국측의 배경에 연유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한 當否는 연구자가 판단할 바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측 위원은 그 두 가지 차세에 서지는 않고,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학계의 연구동향과 그 성과에 따라, 또한 자신의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거하여 관계사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고대 일한관계사의 연구가 특정의 정치환경 속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속에서, 日韓 간의 공동 뿐만 아니라 中國, 歐米의 연구자들도 포함하여, 고대 동아시아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국가의 형성과 경제, 사회와 문화의 형성에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어 왔는가를 연구하고 싶다.

第1分科委員會의 活動을 마무리하면서

—座談會와 研究內容에 대한 批評—

盧重國

I.

2002年 5月 韓日歷史共同研究委員會가 發足되었다. 本 委員會는 2001年 日本中等學校 歷史教科書의 內容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韓日兩國 頂上間에 이루어진 合意 事項에 依據하여 만들어졌다. 본 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 후 1分科는 17차례의 分科共同會議를 열어 共同研究發表會를 가졌다. 그러나 1分科 첫 모임에서 느낀 것은 韓日兩側이 이 모임에 參與하는 立場의 차이가 컸다고 하는 점이었다. 韓國側은 教科書 問題와 連繫하여 研究主題를 設定하려는 立場을 가졌고 日本側은 가능하면 그것을 排除하려는 立場이었다. 이러한 立場 差異가 완전히 解消된 것은 아니었지만 만나는 回數가 늘어나고 서로의 意見를 交換하게 되면서 한일 양국 학계의 상황도 알게 되고 또 서로의 입장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본 모임의 一次的인 成果라 할 수 있다.

II.

座談會는 두 차례 열렸다. 여기에서 4·5·6세기 한일관계사의 문제점에 대해 집

중적으로 토론하고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5세기의 주제와 관련하여 《송서》 왜전의 왜왕 무의 上表文에 나오는 ‘渡平海北’이 어디를 가리키며 ‘祖禰’와 ‘邊隸’의 實體가 무엇인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있었다. 渡平海北의 대상에 대해 일본학계의 통설은 한반도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發題者인 노중국은 《三國志》 동이전 왜전에 낙랑·대방군을 출발한 중국 사신이 邪馬臺國까지 가는 방향이 남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日本書紀》 神代 上에 나오는 宇佐鳴를 근거로 海는 濱戶內海이고 海北은 九州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 위원들은 海北은 九州가 아니라 통설처럼 한반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祖禰에 대해 노중국은 왜왕 무의 祖와 父이며 구체적으로는 왜왕 珍과 濟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일본측 위원들은 祖禰를 祖父로 볼 수도 있지만 ‘옛 조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邊隸에 대해 노중국은 송의 조서에 왜왕 홍의 왕위 승계를 ‘新嗣邊業’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과 무의 상표문에 백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측 위원들은 통설처럼 백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하였다.

이처럼 왜왕 무의 상표문에 대해 백제자와 일본측 위원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왜왕이 자칭한 六國 또는 七國諸軍事號에 대해 일본측 위원들은 이것은 ‘倭가 韓半島南部諸國을 支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다만 왜왕이 그러한 생각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왜왕의 자칭호가 왜의 한반도 남부지역 지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韓國側 委員들의 見解와 脈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倭五王의 問題는 이번의 研究만으로 解決될 수 있는 性格의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다 深度있는 研究가 진행되어 倭王의 自稱號의 性格이 밝혀지고 그것이 韓半島諸國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共同의 理解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차례 열린 座談會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각자가 發題文을 내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상대방이 문제를 어떻게 認識하고 있고 또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회의 좌담회만으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없었다. 앞으로의 공동연구에서는 좌담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III.

5세기 倭五王 문제를 다룬 石井正敏 위원은 3가지 事項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는 413년에 倭가 晉에 使臣을 派遣한 것은 事實이지만 人蔘과 貂皮라는 朝貢品과 細笙과 麝香이라는 回賜品은 高句麗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451년에 倭王濟는 宋으로부터 安東將軍號를 받은 것이 아니라 安東大將軍으로 進號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宋이 高句麗王에게 征東(大)將軍을, 百濟王에게 鎮東(大)將軍을, 倭王에게 安東(大)將軍號를 준 것은 이들 나라가 宋과 가진 交涉의 先後에 의한 것인지 國力의 優劣에 의한 國際的 評價나 王의 身分의 高下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倭五王 問題에 대해 日本學界에서는 많은 연구성과들이 나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關聯史料를 客觀的으로 면밀히 分析·檢討하여 이러한 結論을 導出해 낸 것은 石井 위원의 繖密한 實證性이 돋보이는 作業이다. 또 都督諸軍事號를 重視한 것과 鎮東大將軍으로의 進號가 옳다고 하는 主張은 倭五王의 爵號 問題를 해명하는데 매우 주목되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評者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疑問點을 지적하고 補完事項을 言及해 두고자 한다.

첫째 宋이 高句麗王·百濟王·倭王에게 征東(大)將軍·鎮東(大)將軍·安東(大)將軍을 授與한 것은 이들 나라가 송과 交涉을 가진 順序의 선후 때문이었다고 解釋할 경우 交涉의 開始順序가 宋이 周邊國의 國王들에게 將軍號를 授與할 때一般的으로 適用되는 原則이냐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宋은 442年에 西域地域에 위치한 河西王沮渠無諱를 征西大將軍으로 冊封한 후 443年에는 武都王 楊文德을 역시 征西大將軍으로 冊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交涉의 개시 순서에 따라 다른 方位名 將軍號를 준다고 하는 石井 위원의 주장과는 다른 사례가 된다. 그러므로 송이 무슨 연유로 고구려·백제·왜왕에게는 交涉의 개시 순서에 따라 각기 다른 方位名 장군호를 수여하고 河西王·武都王에게는 동일한 방위명 장군호를 주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둘째로 倭國王이 自稱한 6國 또는 7國諸軍事號 및 宋이 百濟를 빼고 除正한 6國諸軍事號가 倭國內에서 또는 倭와 韓半島諸國과의 關係에서 어떠한 機能을 하였으며 그 性格은 무엇인가 하는 問題이다. 이 問題에 대해 石井 위원은 다만 '倭國王은 百濟의 軍事的支配權을 要求하는 데는 安東(大)將軍으로 充分하다고 생각하였다.'든가 '宋이 倭國王에게 마지막까지 都督百濟諸軍事號를 주지 않았던 것은 이미 百濟王에게

都督百濟諸軍事號를 주었기 때문이지倭國王의 將軍號가 百濟王의 將軍號보다 낮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만 말하였다. 그렇다면倭國王의 軍事的支配權의 要求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宋이都督諸軍事號를 承認한 新羅·任那·加羅…에 대한 軍事權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언급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로石井 위원은義熙起居注에 나오는倭의朝貢品인貂皮와人蔘을高句麗의特產物로 보고, 또回賜品인細笙과麝香에 대해當時倭의文化水準에서 미루어보았을 때倭에게는 어울리지 않고高句麗에 어울리는 것으로解釋하고 결론적으로義熙起居注 기사는 고구려와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음과 같은事項을 먼저考慮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하나는《魏書》高麗傳에 의하면高麗는自國產이 아닌扶餘產黃金과涉羅產珂를北魏에朝貢品으로 보내고 있다. 이것은 어느나라가中國에朝貢品을 바칠 때 꼭自國의特產品만 바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人蔘의 경우高句麗의特產品이기도 하지만백제의特산품이기도 하였다. 梁나라陶弘景의《本草經集註》에 의하면百濟에서生產되는人蔘은高句麗보다質이 좋은上品이라하고 있다. 따라서朝貢品을 검토할 때 이 두 가지 점도 함께 검토하였으면 좋지 않을까 한다. 다른 하나는 중국은조공해온나라가 잘 모르는回賜品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다.《三國史記》신라본기法興王15年條에梁나라가신라에사신을파견하여신라가이름도용도도모르는香을公式의으로전해준것이그예가된다. 이것은義熙起居注에서晉이倭에게倭가잘모르는細笙과麝香을回賜品으로주었다는것과매우恰似한모습이다. 따라서貂皮와人蔘을高句麗의特產品으로보고細笙과麝香은왜에게는어울리지 않는다는전제위에서義熙起居注의記事를高句麗만에관련되는것으로斷定하기는 어렵지않을까한다.

IV.

이번 분과활동에서 고대한일관계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도 많이 제시되었다. 5세기의 경우日本側委員들은最近에榮山江流域에서發見되고 있는前方後圓墳에많은關心을表明하였다. 우리학계에서는이고분의주인공의實體를두고여러가지논쟁이벌어지고있는실정이며,日本考古學界에서는이前方後圓墳을慕韓과連結시켜보는見解도나오고있다. 따라서이問題에대해앞으로韓日

兩國 學者들 사이에 진지한 檢討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6세기에서 佐藤元원이 다룬 倭의 佛教受容, 倭의 漢字文化 受容, 大臣外交, 磐井의 戰鬪 등도 각각 공동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3세기 이전의 경우 濱田 위원이 부분적으로 언급한 衛滿朝鮮 문제, 漢四郡 문제, 三韓 문제 등도 왜와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7세기 이후의 경우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 및 밭굴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일본과의 관계 등도 앞으로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文獻資料가 부족한 고대사 연구에서는 考古學的 성과를 많이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韓半島와 日本列島에서 밭굴 조사된 古代 遺蹟의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遺物들을 서로 비교·검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1分科에서는 공동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한 후 合同으로 遺蹟地를 踏査하고 博物館에 전시된 遺物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兩地域 사이에서 이루어진 文化交流의 실상을 理解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遺蹟地에 대한 共同踏査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V.

韓日間의 歷史問題는 韓國이 近代社會로 進入해 들어오는 過程에서 日本의 植民地가 되면서 胚胎된 것이다. 그러나 光復 이후 韓日兩國 사이의 過去史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問題는 韓日兩國의 共同의 發展과 東아시아의 平和와 繁榮을 위해서도 반드시 解決되어야 한다. 歷史問題의 解決없이 未來를 향한 共同의 步調를 취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 문제는 그 연원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韓日學者들이 서로에 대한 理解를 깊이 하며, 共同의 研究作業을 持續的으로 進行하여 歷史의 事件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공동의 共同의 認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양국 국민들과 共有하는 과정이 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 생각을 교환하고, 학문적으로 비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側面에서 보았을 때 第1期 韓日歷史共同研究委員會는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韓日兩國學者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共同으로 研究하고 討論하면서 共同의 認識을 넓혀 나갈 수 있는 機構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日本의 中等學校 歷史教科書 執筆者들이 教科書를 執筆할 때 本 委員會에서의 研究 成果를 教科書 내용에 일정하게 反映하여 懸案으로 된 歷史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端初를 열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共同研究를 마치고

石井正敏

거의 3년간에 미치는 공동연구를 마치려고 하는 이때, 지금까지의 성과를 뒤돌아 보고자 한다.

제1분과에서의 연구 활동은 각 위원의 연구발표와 토의, 실지조사 그리고 좌담회라고 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위원의 연구 발표에서는 4~6세기를 중심으로 일·한 양국의 고대사학계의 연구 상황을 반영한 연구 성과가 보고되어 크게 배우는 바가 많았다. 또 실지조사에서는 일본과 한국내의 주요한 유적을 방문하여第一線의 연구자로부터 설명을 받을 수 있어서 평소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본인에게는 매우 자극적이고 아주 의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시간은 이번의 보고서 논문 작성에 있어서 크게 참고가 되었다.

그리고 각 위원의 연구 보고를 거듭한 후에 행해진 좌담회는 총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깊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끝나버렸다고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특히 어렵게 생각하는 점은 보고서 게재논문의 개별적인 문제의 토의에 집중한 나머지, 일·한 관계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문제, 혹은 금후의 전망에 대해서 거의 다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좌담회에서 본인이 기대하였던 것은 《일본서기》, 《삼국사기》 등의 기본적 사료의 성격에 대해서 현재 양국 학계에 있어서의 성과에 근거하는 논의였다. 마침내 최종회의 최후에 그 문제를 다를 수가 있었지만 논의가 빗나간 감이 없지 않아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바이다. 그러나 《일본서기》에 대해서는 한국인 연구자에 의한 역주서도 간행되고"(본 분과회의 김현구 위원이 중심으로 되어있다), 본격적인 연구체

제가 정비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 이제부터의 진전이 크게 주목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는 소재로써 연표를 작성하였는데, 다음 기회에 검토를 진척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발표나 토의, 좌담회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한·일관계사에 대한 기본 인식이나 논점의 소재 등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었던 반면, 토의를 거듭해왔던 양국 위원 간에서도 이해나 의견을 공유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감상일 것이다.

그런데 개별연구에 있어서는 5세기의 일·한관계연구를 담당하고 왜 5왕을 주요한 연구테마로써 한국측 노중국 위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별 발표 및 상호 의견 교환을 거쳐 본인은 보고서에 게재할 논문으로서 <5世紀의 日韓關係 -倭의 五王과 高句麗·百濟->를 정리할 수가 있었다. 논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적고 남겨진 과제는 많지만, 자신의 논문의 서언에서 서술한 것처럼 역사인식의 문제를 공동으로 토의하려고하는 지금이야말로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을 배제한 실증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부터, 이미 해명되었다고 보이는 기본사료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해를 얻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한다.

한편 노 위원은 <5世紀 韓日關係史 -《宋書》倭國傳의 檢討->라는 논문을 정리하고 《송서》왜국전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논문의 처음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의 《송서》왜국전, 왜 5왕 연구가 긴 연구사를 가지고 현재도 활황을 띠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행해져오고 있지 않았다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시도한 점을 우선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보이지 않았던 흥미 깊은 지적이 있었던 반면, 여러 가지의 과제도 남겨졌다고 생각한다. 사료 해석의 문제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과 평가에 맡기기로 하고 주로 사료비판에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두·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약간의 코멘트를 달아 공동연구의 책임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III-1 宋의 加號에 加羅가 삽입된 배경’과 관련하여

우선 451년(元嘉 28)에 왜국왕 濟가 송으로부터 더해진 관호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라고 하고 백제가 빠진 점에 대해서 濟는 加羅를 포

함한 都督七國諸軍事를 자칭하였지만 송이 백제를 제외한 칭호를 주었다고 보는 견해(田中俊明氏 · 高寬敏氏)에 대하여 노씨는,

“왜는[珍의 때-石井] 백제가 포함된 都督諸軍事號를 받을 수 없다고 일자마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방법으로써 [濟는-石井] 百濟를 제외하고, 加羅를 넣은 都督六國諸軍事를 요청하고 송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승낙하였던 것이다.”

라고 왜국왕이 자주적으로 ‘백제’를 빼고 ‘가라’를 넣어 ‘都督 … 六國諸軍事’를 요구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왜국왕이 스스로의 의지로 백제를 제외한 都督諸軍事號를 요구하였다고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고, 그 후에 왜국왕 武는 王位계승 후 최초의 입공에서 ‘都督倭 · 百濟 · 新羅 · 任那 · 加羅 · 秦韓 · 慕韓七國諸軍事’라고 백제를 포함한 七國諸軍事를 자칭하여 승낙을 구하고 있다. 노씨는 뒤의 ‘IV-1’에서 왜왕 武의 七國諸軍事 요구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武의 七國諸軍事 요구에 언급하고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2. ‘IV. 東征 · 西服 · 渡平海北과 軍號 · 郡號’에 관련하여

1) ‘祖爾’의 해석과 일본열도의 정치적 통일시기를 둘러싸고

노씨 논문은 武의 상표문에 “祖爾躬擐甲冑, 跋涉山川, 不遑寧處.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라고 하는 기사의 검토에서 祖爾는 武의 祖父와 父이기 때문에 珍과 濟에 해당한다고 하고,

“珍과 濟에 의한 정복활동은 대략 440년대로부터 460년대 사이에 행하여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武의 상표문 만을 근거로 하여 440년대로부터 460년대에 걸쳐 불과 20년 만에 일본열도가 통일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열도의 정치적 통일의 시기를 둘러싸고는 대규모 고분의 전국적 전개 등 고고학의 성과를 참고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그 외에 자기주장에 가득 찬 무의 상표문이라고 하는 사료적 성격에도 유의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2) ‘渡平海北’의 이해를 둘러싸고

왜국왕 武의 상표문에 보이는 정복기사에는 ‘渡平海北’의 ‘海北’이 어느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가 문제가 된다. 일본인 연구자에 의한 통설이 한반도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노씨는 ‘海北’은 九州지방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일본서기》에서는 한반도를 西 · 海西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가 많다.
- ② 《일본서기》 神代上 第6段 一書第三에 ‘宇佐嶋’가 ‘海北道中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宇佐嶋은 현재 大分縣 宇佐郡의 宇佐이다.

이상으로 ‘海北’이 九州지방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宇佐嶋’를 현재의 大分縣 宇佐라고 이해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海北’의 용례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서기》 欽明天皇 15년(554) 12월조에 보이는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泊同心 欲殘滅海北彌移居”이다. 이 ‘海北’은 명백히 한반도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노씨는 논문의 주67에서 이 기사에 언급하고 “한반도를 海北이라고 표현한 기사가 있지만 이것은 西로 표현한 기사의 빈도와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기사의 빈도보다도 기사의 질을 중시해야 할 것이고 간단한 注 정도로 끝낼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씨 논문에는 그 외에 武의 상표문에 보이는 ‘邊隸’를 왜의 사절단이라고 하는 이해, 혹은 413년의 왜국사가 현상했다고 하는 담비가죽·인삼은 백제에서 입수한 것이라고 하는 등 몇 가지 주목해야 할 해석이 보이는 것과 동시에 문제를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한다.

이상 거의 3년에 이르는 공동연구를 뒤돌아보고 노씨 논문에 대해 약간 감상적인 코멘트를 서술해보았다. 본인의 연구발표에 대해서도 노씨를 비롯한 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교시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전부를 논문에 반영할 수는 없었다. 특히 일본열도에서의 정치적 통일, 고대국가의 형성과정과 5세기의 일·한관계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래의 고고학 조사의 진전으로 두드러진 심화가 이루어져 있고 왜 5왕 자체에 대해서도 府官制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보고서 논문의 검토와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계속하여 본 위원회에서의 공동연구의 성과를 거두는 일에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공동연구를 마치고

金 鉉 球

‘6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공통된 역사인식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3년 가까이 계속했다.

고대 한·일 관계를 전하는 기본 사료로써는 한국 측의 『三國史記』와 일본 측의 『日本書紀』가 있다. 그 중 『三國史記』에는 6세기가 되면 왜에 관한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반면 『日本書紀』에는 6세기의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다수의 기사가 보인다. 따라서 쉽든 좋든 6세기의 한·일 관계는 『日本書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6세기의 한일관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두 나라만의 관계가 아니라 다국간의 관계로서 밝히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당시 일본열도와 한반도와의 교류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국 간의 관계가 먼저 밝혀져야 나머지 다른 교류들의 성격도 보다 분명해지리라고 생각된다.

6세기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종래에는 『日本書紀』를 바탕으로 야마토 정권이 임나를 중심으로 한반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소위 ‘임나일본부’설이 통설적인 지위를 점해왔다. 그러나 『日本書紀』에 보이는 국가 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람과 물건이 교류된 농담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국과의 관계는 임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고 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임나와의 관계는 백제를 도와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은 『

日本書紀》 편자의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三國史記》에는 6세기의倭에 관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던가, 《日本書紀》가 백제계 사료 중심으로 되어있고 가야계 사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日本書紀》의 관계기사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과거의 통설적 견해들이 한일관계의 기둥으로 내세웠지만 지금은 비판받고 있는— 《日本書紀》의 관계기사들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려하지 않고 있다.

《日本書紀》에 백제계 사료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日本書紀》에 반영된 백제계 사료를 제외하더라도 당시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국과의 관계가 종래의 통설과는 달리 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임나와의 관계는 백제를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다는 《日本書紀》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日本書紀》에 임나계 사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가 임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논거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백제계 사료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日本書紀》에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와의 관계가 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내용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없다.

대부분이 6세기 이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三國史記》에는 왜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인다. 그런데 왜와 백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신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은 부정적인 관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5세기를 중심으로 한 《三國史記》의 내용도 《日本書紀》에 보이는 6세기의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국과의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4세기 말 ~ 5세기 초의 왜와 한반도 각국과의 관계도 《日本書紀》에 보이는 6세기의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국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사료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추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6세기의 한일관계는 과거 통설론자들이 한일관계의 기둥으로 내세웠지만 지금은 비판받고 있는 《日本書紀》의 관계기사들의 원형이 무엇이었는가를 검토한 후, ‘왜 《三國史記》에는 6세기의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국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가?’라던가, ‘왜 왜와 가야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보이지 않는가?’라는 것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세기 왜와의 관계가 《三國史記》에는 보이지 않는다거나, 백제계 사료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거의 통설론자들이 한일관계의 기둥으로 내세웠던 《日本書紀》의 관계기사들에 대한 재검토를 유보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견해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6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공통된

역사인식을 도출하기 위한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6세기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각국 간의 교류에 관한 기존의 잘 못된 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共同研究를 마치고

佐藤 信

*金鉉球 教授의 論文을 읽고

『日本書紀』의 기재 자체를 통하여, 6世紀의 倭와 百濟·加耶兩國과의 관계에 대하여 計量的·內容적으로 분석하여, 倭와 百濟의 밀접한 관계를 軸으로 하여 6世紀의 日韓關係史가 전개되었다고 하는 重厚한 논문이다. 고대의 日韓關係를 볼 때,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십상인 『日本書紀』의 기사 자체를 의심하지 않고 분석하여, 倭와 百濟, 倭와 加耶의 외교 관계를 검증한다고 하는 『日本書紀』 논리에 대한 접근 방법은 우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절차이며 그 점에서 고마운 연구 성과라고 생각한다.

감히 의견을 말한다면, 共同研究의 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하의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마음에 걸리는 바가 있었다. 우선 『日本書紀』의 논리와 6世紀 日韓關係史의 실태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즉 『日本書紀』의 編纂過程에서는 加耶는 먼 과거에 멸망하여 버린 나라인데 대하여 百濟는 唐·新羅의 공격으로 멸망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倭에 많은 귀족들이 渡來하여 『日本書紀』의 편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생각되기에, 『日本書紀』의 한반도 관계 기사가 자연히 百濟中心으로 된 면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또 國家間의 외교 관계에 관하여 輕重을 헤아릴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多國間의 多元的인 외교를 시야에 넣을 때倭에게 있어서 高句麗·百濟·新羅·加耶 그리고 中國 南北朝의 여러 帝國과의 관계는 모두 각각 중요하였을 것이고 예컨대 遣使 史料의 많고 적음이 외교 관계의 輕重

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한정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日本書紀》의 논리를 고찰한 이 논문의 의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싶다. 금후 考古學의 발굴 조사의 성과 특히 출토 문자 자료 등에 의해 6世紀 日韓關係史가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日本書紀》의 사료 비판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座談會를 마치고

日韓歷史共同研究委員會 第1分科會에서 4世紀, 5世紀, 6世紀의 日韓關係史와 象 후의 日韓關係史 연구를 테마로 한 座談會를 마치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해두고자 한다.

우선 座談會를 통하여 ‘日本の 研究者’와 ‘韓國의 研究者’ (특히 座談會의 參加者 누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로서 느낀 日韓 兩國 研究者 각각의 ‘立場’ 같은 것임) 사이에는 좀처럼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도량이 아직 가로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과, 그렇다 하더라도 歷史를 배우는 연구자로서 같은 場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도량을 좁히면서 풍부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 그 양면을 느꼈다.

특히 史料를 향하기 이전의 歷史觀이란 측면에서 前者の 도량을 느끼는 적이 많고, 史料에 의거한 實證的 研究의 측면에서는 後者の 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점에서는 先入觀으로서의 歷史觀에서 史料 解釋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史料에 의거하여 설득력 있는 歷史像을 수립하여 가는 방향에서의 共同研究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또 도량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여 풍부한 共同研究의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古代까지 소급해 올라가지 않는 近代國民國家 (‘日本’이라든가 ‘韓國’) 의 구조 틀을 제거하여, 자립한 연구자 개인으로서의 입장에서 歷史 史料를 공평하게 대면하는 共同研究를 계속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의미에서는 이번의 共同研究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未熟한 이번의 성과 위에 서서, 앞으로 젊은 세대의 日韓 研究者の 시대에는 國家와 ‘優越意識’에 구속되지 않는 형태로 자연스럽고 公平한 共同 研究와 研究 交流가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